박근혜의 한마디… 한나라 '공황'

"미디어법 제동 진의 뭐냐" 벌집 쑤신듯
"들러리 서진 않겠다"… 親朴 결속 효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제동을 건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 속내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친박(친 박근혜)계에서는 원칙을 중시하는 박 전 대표의 의지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믿기에는 너무나 정치적 파장이 큰 발언이어서 정가에서는 20일에도 발언의 숨은 뜻 풀이가 계속되고 있다.

우선 친박계 말대로 박 전 대표가 미디어법 개정이나 국회의장 직권상정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야당과 진지하게 협상하는 '과정'이 미흡했고 당의 수정한 자체도 알 수 없는 상황을 문제삼은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직권상정 추진 하루 전에 공개적으로 '반대론'을 펼쳐 당 전체를 혼란스럽게 한 상황을 설명하는 이유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박근혜 수정안'이 한나라당 수정안과 거리가 있는 점을 불만스러워 한 게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수정안은 한 방송그룹이 방송시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일식 시청점유율 제도'를 도입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박 전 대표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 박 전 대표는 기존의 방송에 신문 등 다른 매체가 들어올 때 매체가중치에 따라 매체합산율을 산출하고, 이 비율이 30%를 넘으면 규제하는 사전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측근 의원은 "여론 독과점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하라는 것이 박 전 대표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같은 분석의 배경에는 지난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특정언론의 편파보도를 접했던 박 전 대표의 경험이 있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미디어법 반대 이유에 대해 "한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이 특정 언론의 비호에 의해 사실상 방치되는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을 거쳤던 박 전 대표로서는 이 미디어법이 어느 특정 언론이 여론을 결합하고, 그것이 권력과 결탁했을 때 어떻게 민의를 왜곡시키고, 정당의 후보 경선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의 발언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우선은 불쾌감에 대한 의사 표시라는 것이다. 자신의 이름을 팔아 미디어법을 처리하려던 안상수 원내 대표에 대해 불쾌한 것이고, 나아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계파까지 들러리 세우려는 청와대에 대한 불쾌감도 강하다는 것이다. 청와대에 대한 반발은 친박 입각설 때문이다.

그런데 불쾌감에 대한 반발로 보기에는 너무 발언이 거칠었다. 왜일까.

우선 입각설에 흔들리는 친박계 중진들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있다. 나아가 자유선진당과 연대를 통해 친박계를 옥죄려하는 친이계에 정면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즉 미디어법을 고리로 이명박 대통령과 명확한 전선을 형성, 친박계 내부를 단속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20일 국회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한나라당 언론악법 강행음모 규탄대회에서 이강래 원내대표가 언론악법 직권상정 저지의 의지를 밝히는 규탄사를 하고 있다.〈왼쪽〉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 상태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누군가와 긴밀히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식 그만 푸시죠" "與가 관용 베푸시죠"

농성장 찾은 박희태, 정세균 대표와 신경전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20일 단식농성중인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위로 방문에 나섰지만 오히려 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박 대표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지도부와 함께 정 대표를 찾아 "양당 원내대표끼리 곧 타협을 하겠다고 하니 오늘 (단식농성) 그만 두시죠"라고 권유하자, 정 대표는 "집권여당이 관용을 베풀어 대화가 잘 되도록 해 달라"고 응수했다.

또, 정 대표가 "4대 개혁법안 가운데 사립학교법 하나 직권상정하고 국가보안법은 끝까지 상정도 못한 17대 국회를 좀 참고해 달라"고 밝힌데 맞서 박 대표는 "'악법'의 판단 기준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맞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에 불참하며 이틀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백범일지'와 성경 등을 읽고 있다"며 "수적으로는 안돼 극단적 방법을 써서라도 '언론악법'을 막기 위해 단식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檢, 새 총장 후보 청문회 앞두고 겁주기?

'천성관 의혹' 관세청 제보자 색출 수사 가속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황인규 부장검사)는 20일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명품쇼핑' 의혹 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한 관세청의 감찰자료를 확보하는 등 제보자 색출 조사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 전 후보자의 부인이 면세점에서 고가의 가방을 샀다고 밝힌 직후 해당 정보의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관세청이 실시했던 내부 감찰 결과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정보 유출자의 신원과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망을 어느 정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면세점에서 일정액 이상을 구매하면 그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되게 돼 있고 이 정보는 관세청 직원이 내부 전산망에 로그인하면 누구나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세청 직원이나 주변 인물이 내부망에서 이를 조회한 뒤 박 의원 측으로 넘겼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확인될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법률은 공공기관의 직원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 이용을 금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용의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대로 당사자를 직접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사실(공공기관의 정보유출에 대한 수사)을 (다른 공공기관에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국가기관에서 관리중인 사생활 정보의 불법 유출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 박 의원 측은 "공항 면세점 쇼핑 자료는 관세청 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연차, 의원 10여명 후원금 직접 지시"

측근 증언… 검찰, 朴 구속집행정지 치료 허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2008년 4월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모두 10여명의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도록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정권(김해갑) 의원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박 전 회장의 측근 정승영 전 정산개발 사장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10여명의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도록 직접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후원금을 전달한 의원의 명단을 밝혀달라는 요구에는 "기소되지 않은 사람도 있어 부담스럽다"며 밝히지 않았다.

그는 또 "일부는 후원금 한도가 차서 전달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연락이 안된 사람도 있으며 '보내지 말라'고 해서 현금으로 전달한 사람도 있다"고 했다.

후원금 전달 과정에 대해 그는 "총선을 앞두고 박 전 회장이 직접 후원 대상 의원의 실명과 액수를 불러줬고 명단을 작성한 뒤 베트남에서 결제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후원금 조성 경위에 대해서는 "박 전 회장의 부재시를 대비해 개인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7억원 가량 있었다"며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3억원을 인출한 뒤 정산개발 금고에 넣어뒀다고 후원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정치인의 경우 서울에 사는 지인을 통해, 전라도 정치인은 전라도 출신 지인을 통해 후원금을 건넸다"며 "평소에 아는 인맥을 통해 지역별로 전달했다"고 전달 방법을 설명했다. 현재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모두 5명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부터 8월14일 오후 6시까지 3주동안 구속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박 전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구속집행이 정지된 기간에 지병인 척추 디스크 및 협심증 수술을 잇따라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완구 충남지사 "총리 생각 없다"

8월 중 개각이 예상되는 가운데 충청권 연대론과 관련해 차기 총리후보군(群)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이완구 충남지사가 국무총리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최근 충남 태안에서 가진 청와대출입 지방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치권에서 충청권 연대론이 부각되면서 차기 총리 후보군에 내가 포함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충청권 연대론이나 차기 총리론은 실체가 전혀 없는 소문을 믿고 소수의 특정 언론들이 마음대로 지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36년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리를) 염두에 두고 일한 적이 없었다"면서 "공직자가 그런 생각(입각)을 하게 되면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공직자의 윤리적 도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만약에 공식적으로 총리 제의가 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즉답을 회피해 청와대로부터 공식적 제의시 고려할 수도 있다는 유동적인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공동취재단=임동욱 기자tuim@

아무도 믿지 말고 한빛고시학원만 따르라!! www.hanbitgosi.co.kr
정부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 특채 통해 3년간 기능직 정원의 15%씩 일반직 전환!!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특채
주말반(토/일) 오전 10:00 ~ 13:00 사, 회 오후 14:00 ~ 17:00 행정학 2개월완성 합격맞춤강의 개강 7월25일
수석합격
오직! 일반직전환 특채대비를 위한 전문강사진! 전용교재!
핵심이론과 쪽집게 문제풀이 특강
일반직 전환특채 합격도 한빛이 주도한다!
업도적 1위! 100%적중도전
전국 최강의 강사진, 최고의 시설에서 당신은 수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9급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고시학원의 대표브랜드- 광주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062)234-0234]